

“통합특별시 됐는데 버스는 왜 갈아타야 하나요”

담양181번 폐선…나주·화순·장성 등 노선 손질

광주특별시 “광역·급행 확대…주민 불편 최소화”

“통합특별시가 됐는데, 버스는 오히려 갈아타야 하나요?”

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으로 생활권은 하나로 묶였지만, 광주와 인접 시·군을 오가는 버스 노선은 오히려 줄거나 바뀔다. 오는 10월부터 광주와 담양·화순·나주·장성을 잇는 시내버스 13개 노선이 축소·전환되거나 폐선되면서 지금까지 버스 한 대로 오가던 주민들이 환승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전망이다.

2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현재 운행 중인 광주시내버스 가운데 나주·담양·장성·화순 등 인접 시·군을 오가는 13개 노선이 10월 노선 개편 대상에 포함됐다. 228번, 지원152번, 진월177번, 좌석02번, 진곡196번, 용전84번, 대촌170번, 두암181번, 용전184번, 충효187번, 첨단192번, 첨단193번, 송정197번 등이다.

이들 노선 가운데 노선 자체가 폐선되는 것은 두암181번 한 곳이다.

광주와 담양을 오가는 두암181번은 담양 대덕을 출발해 창평·고서 등을 거쳐 광주 서방사거리육교까지 운행해왔다. 평일 배차간격이 130분에 달할 만큼 운행 횟수가 많지 않다.

통합특별시는 담양군 농어촌버스와 운행 구간이 겹치는 데다 이용객도 많지 않고, 담양군 버스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폐지하기로 했다.

노선마다 변화의 폭도 다르다. 운행 구간을 줄이는 노선이 있는가 하면 기존 노선을 다른 노선으로 전환하거나 분리하는 노선도 있다.

화순에서는 228번과 지원152번의 운행 방식이 바뀐다. 228번은 사평 방면 운

행을 없애고 화순군 도용리를 중심으로 변경한다. 지원152번은 급행1003번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능주역 방면 운행이 사라진다.

나주와 장성 등 인접 시·군을 오가는 노선도 운행 방식이 달라진다. 좌석02번과 진곡196번, 대촌170번을 비롯해 첨단192·193번, 송정197번 등이 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주민들에게는 노선 하나의 변화도 작지 않다. 지금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던 곳을 다른 버스로 갈아타야 하는 등 이동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와 나주·담양·화순·장성은 행정구역은 나뉘어 있지만 출퇴근과 통학, 병원

진료 등을 위해 주민들이 매일 오가는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이다. 특히 광주와 인접 시·군을 잇는 버스는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주민들에게 중요한 이동수단인 만큼 노선 개편에 따른 불편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주민은 “버스를 한 번 타고 갈 수 있던 곳을 중간에 갈아타야 한다면 아무래도 불편하지 않겠느냐”며 “대체 노선이 있다고 해도 환승해야 하고 배차시간까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면 평소 버스를 이용하던 주민들에게는 불편이 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인접 시·군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화순군의회를 비롯해 나주·담양·장성 등 인

접 시·군의회와 지자체들은 통합특별시가 적자 해소 등을 이유로 인접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외면하고 있다며 개편안 철회와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지방의회는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집단 대응에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증폭되는 노선과 저수요 구간을 정리해 불필요한 운행을 줄이고, 확보된 운행 자원은 광주 시내 지선 노선 확충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노선이 폐지되거나 운행 구간이 줄어드는 곳은 기존 다른 노선이나 광역·급행노선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전남광주특별시-무안군, 군공항 이전 국가지원사업 공조

TF가동…단장에 고평완 부시장

국가산단 조성 등 지원방안 모색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군공항 이전 무안군 지원 방안 논의에 착수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군공항 이전 부지 지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광주특별시는 지난 21일 광주청사에서 ‘무안군 지원사업 전담팀(TF)’ 첫 회의를 열어, 무안군이 요청한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특별시 지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TF 구성은 지난 8일 민행배 시장과 김산 무안군수 회동 이후 신속한 약속 이행을 위해 꾸려졌다. 당시 민 시장과 김 군수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해 군공항 이전 등에 상생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TF는 이날 첫 회의에서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무안군이 추진하거나 중앙부처에 건의한 주요 지원사업을 공유하고, 광주특별시와 무안군이 협력과 공동대응을 통해 정부부처와 협의에서 진전을 끌어낼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담팀(TF)은 고평완 안전민생부시장 이 단장을 맡고 자원사업별로 관련 실국장이 참여한다. 무안군에서는 김병중 부군수가 참여한다.

첫 회의는 무안군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에 이어 각 실·국에서 검토한 행정지원 방안을 공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고평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안전민생부시장일 21일 광주청사 부시장실에서 열린 '군공항 이전 관련 무안군 지원사업 전담팀(TF)' 회의의 주재하고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무안군 국가지원사업은 군공항 이전 3대 선결조건인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포함해 농수산 자원연구시설, 도시개발, 에너지, 미래산업 분야 등 무안군의 발전과 직결된 사업들로 구성됐다.

김병중 무안 부군수는 “광주 군공항 이전을 계기로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전남광주가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이 무안군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양 측의 논의가 단순 건의에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적

극적으로 협의해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특별시는 TF를 통해 무안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지역 현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또 사업별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관계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무안군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

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특별시와 무안군 지원사업 전담팀을 가동하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방부와 광주특별시, 무안군은 오는 28일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는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된 무안군 망운면 일대가 이전후보지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동민 기자 yang00@

“호남 반도체 용수, 하수처리수 재이용”

최경미 광주특별시의원 토론회…용수 확보 방안 논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 확보 대책의 하나로 꼽히는 하수처리수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최경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의원은 지난 21일 광주청사에서 ‘호남 반도체 용수, 하수처리수 활용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제기되는 용수 부족 문제를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공업용수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의 발제와 토론을 맡은 최낙선 ‘하수 방류수를 반도체 용수로 추진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는 “기후 위기 속 댐을 이용한 용수의 공급은 한계가 있다”며 하수 방류수를 반도체 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물을 많이 확보하는 방식이 아닌 물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재이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극한 가뭄에도 시민의 생활용수를 지킬 수 있는 산업구조를 만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을 진행한 유승용 KBS 광주방송총국 기자는 대만 반도체 산업 사례를 들어 용수 재이용 기술 개발과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인 기반 시설 투자, 주민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학오 〇 해수군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지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회생을 강요하는 발전이 아닌 상생을 통한 지역 발전 방안을 전제조건 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미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전력과 용수가 중요한 산업이고 국가 전략산업일수록 안정적인 용수 확보를 위해 생활하수 재이용, 주암댐을 포함한 광주 주변댐 댐 이용, 해수 담수와 이용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며 “시민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고려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나주에 고용유발 앵커기관-연구·사업 기능 결합

▶1면에서 실제 나주는 종합 B등급이지만 성장 C·활력 A·협력 B로 평가됐고, 전주 역시 종합 B등급 가운데 성장 E·활력 A·협력 B로 나타났다. 전주와 협력 기관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성장 분야가 취약하다는 공통점이 있는 만큼 고용과 산업을 유발하고 지역 기업·대학과 연계할 수 있는 앵커기관을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공공기관 배치 기준으로 ‘3축 모형’을 제안했다.

먼저 ‘균형발전 필요도’는 성장·활력·협력 분야에서 어느 부분의 병목이 심각한지를 살펴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기관 기능 적합도’는 이전 기관의 예산·조달·연구·교육·데이터·시설·인재·정책 기능이 해당 지역의 산업·대학·기업·생활권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지역활용역량’은 기존 공공기관의 지역 기여도와 광역·기초지자체의 지원 역량, 기관과 지자체 간 협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방식이다. 연구원은 상생자수를 지역활용역량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하되, 종합점수를 공공기관 배치 점수로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성장확장형·특화보강형·기반선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차별화된 전략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전주·진주 등 성장확장형 지역에는 고용·산업 유발형 앵커기관에 연구·사업 기능을 결합해 성장의 병목을 직접 완화하고, 원주·진천·음성·대구·부산·울산 등 특화보강형 지역에는 지역 산업과 연

결되는 기관을 배치하면서 정주·협력·산업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천·서귀포 등 기반선형형 지역은 대형 기관을 곧바로 배치하기보다 전담조직과 조력, 정주환경, 지역 대학·기업 협력망 등 수용 기반을 먼저 갖춘 뒤 단계적으로 기관을 배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연구원은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밖 여러 지역에 분산 배치하자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물리적인 입지는 혁신도시를 기준으로 하되 조달·연구·인재양성·산업연계 등 기관이 만들어내는 효과는 주변 시·군과 광역권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에너지 관련 기관이 혁신도시에 입지하더라도 연구개발과 지역기업 조달, 대학 공동연구, 인재양성, 실증사업 등을 인접 시·군과 광역 산업권까지 연결하는 방식이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정부에 3축 배치모형 도입, 혁신도시 입지와 광역 연계 구분, 기관·지역 기능 매칭 의무화, 지자체 성장고리 계획 의무화, 기관 5년 상생계획 및 3차 협약 도입, 매년 상생지수 평가와 정책 환류, 성과별 차등지원과 우수모델 확산 등 7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이민원 혁신도시정책연구원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라는 물리적 기반을 만들었다면 2차 이전은 공공기관의 기능을 지역경제 안에 뿌리내리는 단계가 되어야 한다”며 “어느 지역이 몇 개 기관을 가져가느냐보다 균형발전 필요도가 어디에서 큰지, 어떤 기관의 기능이 지역의 병목을 풀 수 있는지, 해당 지역이 기관 기능을 실제로 활용할 역량을 갖췄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1면 ‘2차 공공기관’서 계속

특별시의회도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발언, 통합법을 통해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원칙이 세 차례에 걸쳐 제시됐다며 정부에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0일 특별시의회 전남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이전계획에 통합지역 우대배정 원칙을 반영하고 종전 광주시와 전남도에 배정될 규모를 합친 것보다 많은 공공기관을 통합특별시에 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특별시는 공공기관 유치추진단을 기존 7개 분과 70명에서 7개 분과 100명으로 확대하고, 이전 대상 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종합지원계획 마련에 들어갔다. 정부 발표 이후 본격화할 기관별 유치전에도 대비하고 있다.

정부 계획에 통합지역 우대 원칙이 어느 수준으로 반영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특별시의 압도적 성장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가 관건”이라며 “대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지원계획을 마련하고 기관별 유치 논리를 앞세운 홍보와 마케팅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100조 ‘미래대응기금’ 신설…3대 메가 등 투자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집중…재정 안정화 기능
교육교부금 연동 폐지·교부세 모수 조정…투자위축 우려

정부가 반도체 연합 호조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법인세 등 세수 증가분을 별도로 떼어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4대 분야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저수지’ 역할의 기금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세(교부세) 등도 조정에 나서면서 지방정부와 교육재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정가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추가세수’를 따로 적립해 활용할 수 있도록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한다.

기금은 취업·주택 마련·결혼·출산·양육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데 투입된다. 인공지능(AI), 3대 메가프로젝트,

소형모듈원자로(SMR)·핵융합·첨단바이오 등 7대 SEED(씨앗) 프로그램에 과감하게 투자해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지방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균형 성장을 촉진하고, 첨단 분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국외 인재를 데려올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한다.

미래대응기금은 추가세수를 주축으로 만든다.

반도체 호조로 세수가 더 늘어나는 경우 미래대응기금이 100조원도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 성장과 학령인구 감소 등 시대변화를 반영해 교육교부금을 대폭 개편한다.

현재는 내국세의 20.79%를 배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3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금액을 산정한다. 1972년 시작한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구조가 막을 내리고 내년부터 새로워지는 것이다.

이를 놓고 지역교육계는 세수 증가에도 지역 교육청 재정 증가 폭은 크게 줄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방교부세 개편도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에 담겼다.

교부세는 19.24%라는 연동 구조를 유지하되, 모수를 개편한다. 지금은 모수가 내국세인데, 앞으로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금액을 모수로 잡는다. 초과세수와 추가세수가 모수에서 빠지는 형태다.

따라서 초과세수와 추가세수가 발생할 때는 교부세가 지금보다 줄어든다. 반대로 세수결손 등이 발생할 때는 미래대응기금에서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기획처는 다음달 3일 예산안과 함께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